



아동기본법과 교육무상화 논의 : 2023 년 제 212 회 ~2024 년 제 213 회 국회 심의에서

와타나베, 아키오

多胡, 太佑

(Citation)

日本教育学会大會研究発表要項, 83:241-242

(Issue Date)

2024-08-29

(Resource Type)

conference paper

(Version)

Author's Original

(Rights)

© 2024 一般社団法人 日本教育学会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0100492816>



아동기본법과 교육무상화 논의

—2023 년 제 212 회~2024 년 제 213 회 국회 심의에서—

○와타나베 아키오(渡部 昭男, 오사카신아이가쿠인대학)

키워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異次元の少子化対策), 아동기본법(こども基本法), 아동 미래 전략(こども未来戦略), 가속화 플랜(加速化プラン), (고등) 교육무상화(〔高等〕教育無償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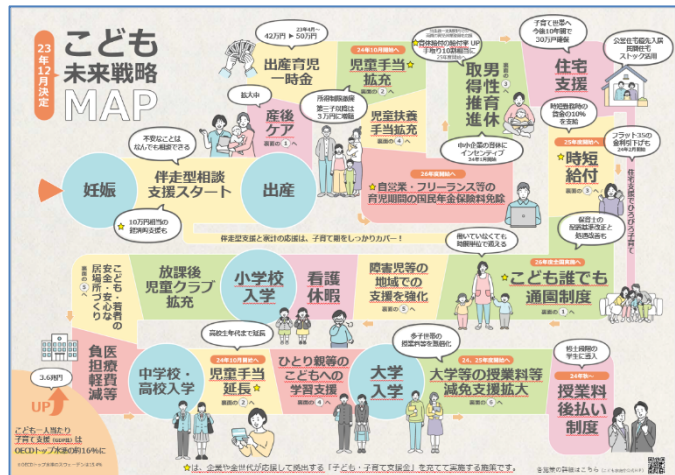
서론. 과제와 방법

아동기본법(2023 년도 시행)은 ‘아동’을 “심신의 발달 과정에 있는 자를 말한다”(2 조 1 항)라고 정의하여, 일률적으로 18 세 또는 20 세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8 세 이상 학생·청년·젊은이를 “심신의 발달 과정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신생아기, 영유아기, 학동기 및 사춘기의 각 단계를 거쳐 성인이 될 때까지 심신의 발달 과정을 통해 끊긴 흔적 없이(seamless)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 이뤄지도록 지원”(동법 제 2 항 1)이라는 관점에서 재고하고, 끊긴 흔적 없는 통합적인 ‘아동 시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논하며 탐구해야 할 연구 과제가 나타났다(본 주제별 분과회 개최 취지). 본 발표에서는 최근 1 년 동안의 정책 동향을 파악한 뒤, 여태껏 해온 방법대로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https://kokkai.ndl.go.jp/#/>)을 활용하여, 국권의 최고 기관인 국회에서의 교육 무상화 논의의 경위와 특징을 밝혀낸다(2023 제 212 회 임시 국회~2024 제 213 회 통상 국회).

1. 정부 측 키워드: 모든 아동·양육 가구, 생애 단계 간 끊긴 흔적 없이, 통틀어 관통

아동 미래 전략 방침(こども未来戦略方針, 23.6.13. 각의 결정)을 바탕으로 수립한 **아동 미래 전략**~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실현을 위해(こども未来戦略~次元の異なる少子化対応の実現に向けて, 23.12.22. 각의 결정)는 ‘세 가지 기본 이념’ 중 하나로 “모든 아동·양육 가구를 끊긴 흔적 없이 지원한다”를 내걸고, “부모의 취업 형태와 상관 없이, 어떠한 가정 환경이더라도 똑같이, 생애 단계에 맞추어 끊긴 흔적 없이 지원을 하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데 대해서는 더욱 꼼꼼히 대응해 나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것을 시각화하여 임신·출산부터 대학원까지 연속적으로 그려낸 것이, **아동 미래 전략 MAP**(こども未来戦略 MAP, 23.12. 아동가정청 <https://www.cfa.go.jp/resources/kodomo-mirai/>)이다. 일원화된 행동 계획·**아동 중심 실행 계획**(こどもまんなか実行計画, 24.5.31. 아동계획추진회의)은 구체적인 로드맵과 수치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KPI(중요 업적 평가 지표)를 설정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면서 PDCA 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아동기본법**은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대해 **아동 대강**(こども大綱, 23.12.22. 각의 결정)을



고려한 아동 계획 수립을 노력 의무화(10 조)하고 있다. **지자체 아동 계획 책정을 위한 가이드라인**(自治体こども計画策定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 24.5.24. 아동가정청)은 아동 계획이 기존의 아동·젊은이 계획, 아동 빈곤 대책 계획 등의 여러 계획을 일원화함으로써, ‘아동 시책’ 전체를 관통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 가속화 플랜 등의 주요 부담 경감책 및 무상화 정책

아동 미래 전략은 가속화 플랜-향후 3 년간의 집중적인 대응-(加速化プラン～今後3年間の集中的な取組～)으로 아동수당 확대(소득 제한 철폐, 고등학생 연령대까지 연장, 셋째 아이 이후 3 만 엔 등), 출산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출산·양육 응원 교부금 10 만 엔, 동반형 상담 지원, 출산 육아 일시금 인상 등), 의료비 등의 부담 경감(실시 지자체에 대한 감액 조정 조치 폐지), 고등교육비 부담 경감(중간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수업료 후불 제도 등)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무상화’라는 용어는 유아 교육·보육의 무상화(단, 0-2 세는 주민세 비과세 가구 한정), 학교 급식비 무상화(우선은 실태 조사 실시와 결과 공개), 다자녀 가구의 수업료 등 무상화(단, 부양 받는 자녀가 3 명 이상인 가구)에 그치고 있다.

3. 제 212 회(2023.10.20-12.13) 및 제 213 회(2024.1.26-6.23) 심의의 특징

정부 측의 시책안에 대해 일본국헌법 등 법 규범에 비추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나은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가속화 플랜&무상화"라는 키워드로 국회 회의록을 검색하면, 제 122 회: 14 건 90 곳, 제 123 회: 66 건 568 곳이 검색 결과로 나타난다(24.7.12. 현재/제 123 회는 의사록 공개가 진행되는 중으로 미확정). 각 정당(회파)의 교육 무상화에 관한 주장 및 논점은 아래와 같다.

자유민주당: 아베 정권 때 소비세를 두 차례 인상하고, 그 재원으로 충실한 사회 보장 및 유아 교육 무상화를 실현...기시다 정권 때는 저출산 대책 예산 증액 등 역사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고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의사록: 212 중의원 본회의 3 호, 23.10.24, 이나다 토모미[稲田朋美]) [‘...’는 생략, ‘/’는 단락 구분을 나타냄] .

공명당: 내년도부터...다자녀 가구나 이공계·농학 계열 중간층으로 확대...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2030 년대까지 대학 등의 무상화를 실현해야.../ 우선 입학금 및 교재 구입, 이사 비용 등으로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대학이나 전문학교(専門学校) 등의 1 학년 학생의 1 학기분 수업료를 무상화(212 참의원 본회의 4 호, 23.10.26, 야마구치 나츠오[山口那津男]).

입헌민주당: 아동수당은 셋째 자녀 이후로 한정하지 않고 첫째 자녀부터 증액한다, 대학 수업료 무상화는 자녀 수와 상관 없이 시행한다.../ 아동수당에 대해 첫째 자녀부터 고등학교 졸업 연도까지 월 1 만 5 천 엔을 지급해야.../ 모든 아이들의 국공립대학 수업료를 무상화하고, 사립대 학생이나 전문학교 학생에게도 국공립대학과 같은 수준의 부담 경감을 한다.../ 공립 초·중학교 급식비 무상화(213 중의원 본회의 3 호 24.1.31, 이즈미 켄타[泉健太]).

일본유신회: 오사카의 양육 가구 지원 정책 중에서, 지방 창생 임시 교부금(地方創生臨時交付金)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이뤄지는 초·중학교 급식비 무상화와, 취학 지원금 인상 또는 교육 바우처를 활용한 고교 수업료 무상화를 이번 경제

정책으로 제안함(212 중의원 본회의 4 호, 23.10.25,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국민민주당: 교육, 과학기술 등 인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예산은, 교육 국채라는 새로운 국채로 보전...(교육 국채로)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대학과 대학원을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함(앞과 같음, 타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일본공산당: 고등교육 무상화를 목표로, 즉시 대학 등의 학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입학금 제도를 폐지하며, 장학금을 급부제 중심으로 개편하고, 장학금 상환액의 절반을 면제해야 함(앞과 같음, 시이 카즈오[志位和夫]).

레이와 신센구미: 고등학교는 당연히 국가의 제도로 무상화.../ 지자체 간 격차를 없애고 공·사립 모두 부모 소득과 상관 없이 무상으로...후쿠이현과 도쿄도는...소득 제한을 철폐(213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 3 호, 24.3.22, 후나고 야스히코[船後靖彦]).

결론. 고등교육의 사비부담 경감은 여러 목적 달성에 기여, 권리보장&저출산 대책 모두 중요

‘고등교육(의) 무상’이라는 키워드로 국회 회의록을 검색하면, ①국제인권규약(무상화 유보 논의, 1978~), ②국난 돌파 해산(저출산·고령화 대책/제 4 차 아베 정권, 2017~), ③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기시다 정권, 2023~)으로 크게 세 시기로 질의의 계보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고등교육의 사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여러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아동의 배울 권리 보장’ 및 ‘저출산 대책’은 모두 동일하게 중요”(내각 중의원 질의 212 제 135 호, 23.12.22)라는 답변은 점진적 무상화와 관련된 중요한 도달점이다.

【감사의 말: JSPS KAKENHI(일본학술진흥회 과학연구비) 22K02702 의 지원을 받았음】